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 16 / Apr. 2018

04

재정 인사이트

기획특집

내 삶을 바꾸는 아름다운 건축, 그린리모델링

재정칼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 추진 방향

청년에게 일과 돌봄의 권리를 보장해야

성평등을 토대로 한 삶의 질 향상

재정과 정보

이슈포커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변화

보이지 않는 혁신, 4차 산업혁명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투명 맑음

Photo Essay
포토에세이

투명한 나라 살림
대한민국은 “언제나 맑음”

“오늘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

지난 봄 내내 한반도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몸살을 겪었습니다.

집밖으로 나설 때마다 일기예보를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었지요.

투명한 나라 살림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재정 운용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가치를 세우며

한국재정정보원은 오늘도 맑고 투명한 나라 살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APRIL
2018 Vol. 16

재정 인사이트

06 **기획특집**
내 삶을 바꾸는 아름다운 건축,
그린리모델링
송시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12 **재정칼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 추진 방향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에게 일과 돌봄의 권리를 보장해야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평등을 토대로 한 삶의 질 향상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정과 정보

24 **이슈포커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변화: 2006-2020

보이지 않는 혁신, 4차 산업혁명

39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50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최저임금

54 **해외재정동향**
캐나다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 특징과 경제 · 재정 전망

60 **풀어쓰는 경제 · 재정이야기 ④**
세계를 제패한 영국의 국가 프로젝트

62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6

12

50

재정 인사이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재정 이야기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합니다

기획특집

내 삶을 바꾸는 아름다운 건축,
그린리모델링
송시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재정칼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 추진 방향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에게 일과 돌봄의 권리를 보장해야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평등을 토대로 한 삶의 질 향상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내 삶을 바꾸는 아름다운 건축, 그린리모델링

송시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song1969@korea.kr

지난 겨울 혹독한 겨울이 언제였냐는 듯 주말이면 전국 곳곳에 만개한 봄꽃을 즐기려는 꽃놀이 행렬이 줄을 잇는다. 예전엔 봄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봄나들이의 불청객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미세먼지가 차지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스모그가 자욱한 거리를 활보하는 외신 사진이 이제는 우리의 현실이 됐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 정체 현상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 현상의 그림자라고 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우리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폭염, 가뭄, 폭우, 혹한 등의 자연재해로 인식했다. 지금은 우리의 일상마저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도 기후변화에 따른 부작용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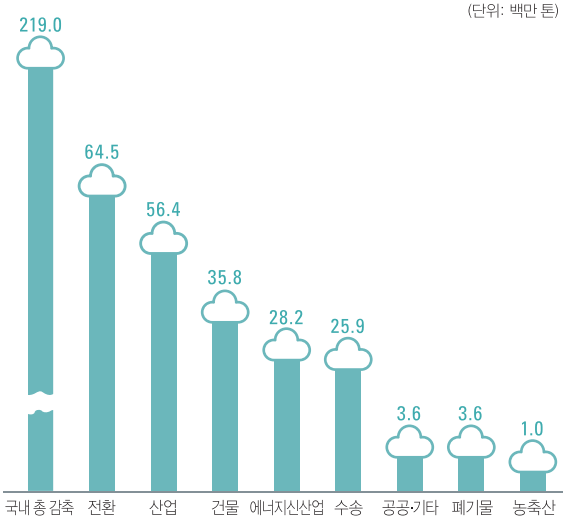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 감축 목표 달성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

전 세계는 일찍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산업화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의 과실을 어느 정도 수확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를 촉발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 하지만 그들만의 노력으로 기후변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2015년 12월 개도국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야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Post 2020을 위한 파리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이제는 모든 당사국들이 앞으로 2030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키로 대내외에 선언했다. 하지만 아직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인 중공업·중화학공업을 기간산업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손실을 최소화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 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의 경우 한 번 지어지

국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목표(COP21)



2030년 부문별 감축목표

부문	BAU (백만 톤)	감축량 (백만 톤)	감축률(%)	
			부문 BAU 대비	국가 BAU 대비
전환	(333.0)주)	64.5	(19.4)	7.6
산업	481.0	56.4	11.7	6.6
건물	197.2	35.8	18.1	4.2
에너지신산업	–	28.2	–	3.3
수송	105.2	25.9	24.6	3.0
공공·기타	21.0	3.6	17.3	0.4
폐기물	15.5	3.6	23.0	0.4
농축산	20.7	1.0	4.8	0.1
국내 감축	851.0주)	219.0	25.7	
국외 감축		96.0	11.3	

주: 배출량 총계(851백만 톤)는 부문별 BAU(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에 공정배출, 가스제조 등으로 인한 배출량(약 2백만 톤) 및 탈루배출량(약 8.4백만 톤)이 추가된 수치이며, 전환 부문의 BAU는 각 부문별 배출량에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전체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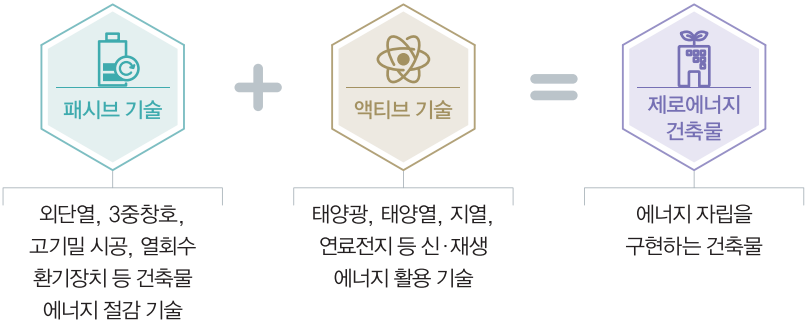
면 30년 이상 사용되므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누적된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어느 분야보다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바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로 에너지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일석이조 효과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하여 에너지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을 새롭게 지어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신축 건축물의 단열성능 등의 에너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은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2020년부터는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어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의 개념

(정의)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다른 하나의 방법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의 규제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달성할 수 있었지만,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건축물은 713만 동에 달한다. 그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절실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260만 1,270동(36.5%)를 차지한다. 건축물의 구조체는 반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단열재·창호·각종 배관 등의 설비는 보통 15년 이상이 경과되면 성능이 저하되어 건축물의 전체적인 에너지 성능을 매우 떨어뜨리게 된다.

2017년 기준 건축물 현황 통계를 보면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이전에 완공된 15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동수는 전체의 67%로 약 477만 동(연면적으로는 20억㎡ 이상, 57%)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에너지 성능 열악한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이 전국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고층 빌딩도 건설 붐을 이루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제1기 신도시와 전국에 지어진 대부분의 고층 빌딩들의 에너지 성능이 매우 열악해진 실정이다.

이처럼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 단열재 보강·창호 교체·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재실자의 쾌적감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는 것을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

국내 건축물 노후도 현황

구분		동수		연면적	
		동수(동)	비율(%)	연면적(㎡)	비율(%)
전체	합계	7,126,526	100.0	3,641,933,374	100.0
	10년 미만(2009~2017년)	1,213,507	17.0	926,522,111	25.4
	10~15년 미만(2004~2008년)	590,960	8.3	536,829,215	14.7
	15~20년 미만(1999~2003년)	633,934	8.9	522,954,929	14.4
	20~25년 미만(1994~1998년)	850,443	11.9	631,426,989	17.3
	25~30년 미만(1989~1993년)	689,123	9.7	431,786,521	11.9
	30~35년 미만(1984~1988년)	483,941	6.8	199,496,806	5.5
	35년 이상(~1983년)	2,117,329	29.7	306,034,258	8.4
	기타	547,289	7.7	86,882,546	2.4

자료: 국토교통부, 2017년 기준 건축물 현황 통계(2018.2.7.)

해외의 경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독일은 독일재건은행(KfW)에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1%의 저리 융자와 함께 에너지 효율 수준에 따라 최대 17.5%의 부채경감 또는 최대 25%의 보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약 10조 원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미국은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년에 걸쳐 재산세에 부과하여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시공·설계 비용 및 기술 지원 제공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에너지 저효율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시공·설계 비용을 지원하고 기술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2013년부터 공모를 통해 19건의 시공 지원과 62건의 사업기획·설계 지원을 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많아 지원 사업을 통해 용도별로 성공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급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공건축물은 20만 동에 달하는데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들이 각 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건축물에 적합한 프로토타입을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경우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공사비를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최대 4%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한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첫해 352건을 시작으로 2017년 8,551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이 공공과 민간에 자연스럽게 정착하여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광역지자체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게 그린리모델링을 포함한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개정된 법률은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 등으로 현재까지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공공 그린리모델링사업 실적

2013 20억 원
- 시공비 지원사업: 4개, 총 15억 원
- 설계 지원사업: 6개, 총 5억 원

2014 20억 원
- 시공비 지원사업: 4개, 총 13억 원
- 사업기획 지원사업: 7개, 총 7억 원

민간 이자지원사업 실적

(단위: 백만 원,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금액	55,702	36,483	75,949	95,763	263,897
건수	352	2,753	7,742	8,551	19,398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배포하였다. 향후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도 내실 있게 조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리모델링이 반영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실 있게 추진토록

새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그린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주거환경의 개선이 밑받침될 수밖에 없는데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사회적·경제적 도시재생 이전에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 말 국토교통부는 68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그 중 19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의 사업계획에 그린리모델링을 포함한 녹색건축계획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반영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하는 '그린리모델링-도시재생 연계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를 보호하고, 국민으로서 국가적 책무를 당당히 이행하는 이타적인 행위이다. 그린리모델링은 낡은 건축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건축이다. 내 삶을 바꾸는 아름다운 건축, 그린리모델링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2015 18억 원
- 시공비 지원사업: 5개, 총 9.5억 원
- 사업기획 지원사업: 26개, 총 8.5억 원

2016 6.25억 원
- 시공비 지원사업: 3개, 총 4억 원
- 사업기획 지원사업: 10개, 총 2.25억 원

2017 7.26억 원
- 시공비 지원사업: 3개, 총 3억 원
- 사업기획 지원사업: 14개, 총 4.26억 원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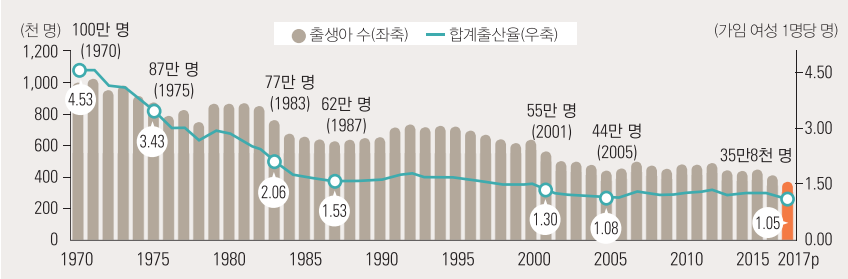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주택학회장
hchun@krihs.re.kr

PUBLIC FINANCE COLUMN

197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여성이 낳는 평균 자녀 수가 4명 이상을 웃돌았으나 현재는 2명 정도로 낮아졌다. 출산율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1.0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인구대체출산율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다. 2001년 이후에는 초저출산율인 1.3명 이하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이후 저출산 해소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가까운 미래에 반등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초저출산 현상에는 가치관의 변화, 경제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 주거비 부담, 가족친화적 제도의 미비로 인한 경력 단절 우려, 성 역할 분담 관행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도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구조가 고령화하면서 가임기 여성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비혼과 만혼 현상이 지속되면서 저출산의 덫이 지속되고 있다.

1970~2017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2) 인구는 1992년 이전은 추계인구, 1993년 이후는 주민등록인구(2010년 이후는 거주 불명 등록자 제외)를 사용함
3) 1998년 이후는 남편과 처의 주소가 모두 해외 주소 자료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산과 주거의 연관성에 대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첫째는 저출산에 주거 문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거 지원이 강화되면 출산율 회복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주거 마련의 부담으로 인해 청년들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각종 사회조사 결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결혼 소요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 남성에서는 신혼주택 비용 75%, 남녀를 합한 경우에도 27.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미혼남녀의 비혼, 만혼 원인 중에서도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률이 미혼남성은 87%, 미혼여성은 88.5%로 남녀 차이 없이 모두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저출산 대응 과제 10개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 3개가 주거 관련 정책이었다.[1] 시민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체감적으로 중요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지역 주택매매 가격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천현숙·이길제, 2016).

둘째,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지원을 강화하면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까?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삶의 질적 수준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망이 갖추어지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어질 것은 분명하다.

1 1위가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위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가점부여정책, 9위가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정보 안내 정책이다(연합뉴스, 2017.12.9.).

최근 10년 혼인지수 추이

(2005년=100)

자료: 통계청

결혼준비 품목별 지출 비용

(단위: 만 원)

자료: 결혼정보회사 듀오, 2018 신혼부부 결혼 비용 실태 보고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정책의 시행이 시기적으로 늦었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출산율 1.57명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1994년에 '엔젤 플랜'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초저출산율이라고 하는 1.3명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 5년 후인 2006년에야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시기적으로 늦기는 하였으나 정부에서도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고 주거 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특별공급,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공급, 전월세지원 금융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특화 상품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고 월 부담도 소득의 30% 이내로 되어 있다. 분양형은 주택가격의 30%를 초기에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유형 모기지로 연계한다. 미혼 청년층을 대상으로 5년간 30만 호실 공급 계획이 있으며 셰어하우스형,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들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지만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들 중 공적인 주거 지원을 받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기존의 공적 주거 지원 정책들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왔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최우선 순위로 지원받았다. 공공임대 입주 시 가구주 연령이나 가구원 수 등이 가점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 사각지대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일반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에 비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주거 지원을 덜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가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지향해 가면서 고령자 외에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특성가구들의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소득과 높은 주거비, 좁은 주거 면적 등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혼부부들은 미혼 청년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거 상태는 양호하지만 부부가 오롯이 육아의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출산 이후 양육의 부담은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하고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은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입주 기회만으로도 주거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자녀 양육으로 인한 장기적인 부담을 상쇄할 수는 없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는 공공임대 수요가 높겠지만 첫째 자녀, 둘째 자녀가 태어나고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보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므로 가구 형성기, 첫째 자녀 출산, 둘째 자녀 출산 등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녀양육 가구의 부담이 결혼 후 5년 또는 7년이라는 일정한 기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 연구에 의하면 모기지 접근성이 양호한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한다. 안정적인 자가 마련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대출 규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젊은 가구들이 자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리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 미래학자 노먼 헨시(Norman Henchey)는 미래를 가능한 미래(possible), 타당한 미래(plausible), 유력한 미래(probable), 선호 미래(preferable)로 나누었다. 우리 미래가 이중 어떤 것이 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율을 극복하지 못하여 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젊은 세대의 고통과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선호 미래보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불안한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야 한다. 미래는 예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변화의 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출산율은 미래 우리 사회의 가늠자다. 우리의 선호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 대한 혁신적인 주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 문헌

- 보건복지부. (2012).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 (2016). 주택과 출산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enchey, N. (1978). Making sense of future studies. Alternatives, Vol. 7, No. 2, pp. 24-28.

청년에게 일과 돌봄의 권리를 보장해야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ayoungy@cnu.ac.kr

PUBLIC FINANCE COLUMN

2017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35.8만 명이고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차원적인 불평등의 심화와 불안한 미래가 청년들의 출산 회피와 거부로 나타나고 있다. 나 혼자 살아 내기도 벅찬 생존의 무게가 관계맺음과 상호 돌봄을 자양분으로 하는 가족과 사회라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일과 돌봄에서 남녀 모두 참여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재생산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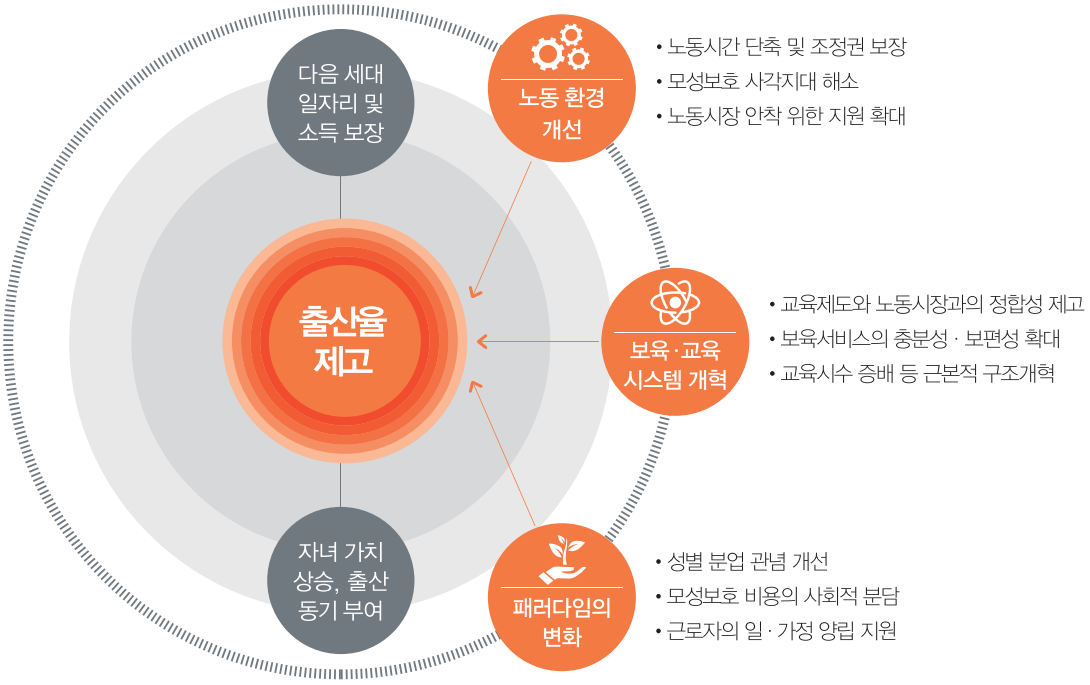
청년층이 가족이라는 삶의 양식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으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 개발의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의 양극화는 결혼·출산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잔존하는 성별 분업 관념은 청년 남성에게 생계부양자라는 무게를 지우며 그들을 대기업 일자리를 얻기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경쟁에서 성공하여 좋은 일자리를 가진 계층의 동질혼은 심화되어 가는 반면, 가족 부양 능력이 부족하다고 간주되는 청년 남성과 맞벌이 여력이 없는 청년 여성의 결혼과 출산은 지연 또는 회피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여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자리와 소득 안정성뿐만 아니라 장시간, 경직된 노동 제도와 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 직장인들, 특히 여성들의 일·생활 갈등은 전반적으로 심각하다. 직장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개인의 여가나 휴식 시간, 지역사회 등에서 어울릴 시간 등을 잠식한다. 가정과 직장 간의 남녀 성별 분업을 전제로 하는 초과 근로와 장시간 노동은 남성의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고 여성에게 직장·경력과 결혼·출산 간의 선택을 강요한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민간부문 근로자에게도 공휴일 유급휴가를 허용한 법제도 개혁은 노동시장에 과도하게 투입하던 시간 자원을 가족과 관계에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와 함께 양육, 가족 돌봄, 교육, 은퇴 준비를 위해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을 법제화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근로시간대, 근로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시차출퇴근제와 정시 퇴근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노사의 상호 이해와 협조만 있다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남녀가 평등하게 일과 돌봄의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급여 수준이 관대하게 조정되면서 혜택의 계층 간 격차도 확대되었다.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임금근로자로 규정될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모호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자격 조건으로 인해 혜택에서 배제되는 근로자들을 더 이상 사각지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이용 중 겪는 소득상실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노동력 생산 비용에 대한 기업, 가족, 국가의 사회적 분담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상태나 근로이력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보육과 교육은 노동시장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근본적 구조 변화와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보육과 교육은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과 보편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시간은 더욱 단축되어야 하지만, 보육과 교육서비스는 현재보다 실질적인 제공 시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의 운영 시간이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맞벌이 모델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초등학교 교육시스템을 부모의 근로시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육시수를 증배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1시 전후에 수업이 종료되어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 자녀 돌봄을 학원과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초등 1~2학년 연간 수업시수는 상당히 짧다. 오후 3시까지 예체능 중심의 정규 수업을 실시하고 그 이후 돌봄 수요를 방과후교실과 온종일돌봄교실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남녀 모두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자녀 양육을 분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돌봄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여성에게 돌봄의 일차적 역할을 지우는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기에 앞서, 노동시간 조정의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과 교육 제도의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수요와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한 사람의 취업자에게 가족의 생존을 맡기는 외벌이 모델과 여성을 시간제 근로자로 만드는 불완전 맞벌이 모델은 가족이라는 경제적 공동체를 지탱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현 세대의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하고 불행한 삶이 예견된다면, 경제적 여건의 충족이 출산으로 이어지리란 보장은 없다. 자녀 가치의 하락으로 과거보다 자녀 출산의 동기도 쇠퇴해 왔다. 하락한 자녀 가치를 상쇄할 만큼 전폭적인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일자리와 소득 지원 효과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jung4202@swu.ac.kr

성평등을 토대로 한 삶의 질 향상

PUBLIC FINANCE COLUMN

2001년 초저출산율의 기준인 1.3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05명까지 추락하면서 17년 연속 한국은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체코, 슬로베니아, 스페인, 이탈리아가 10년 연속 초저출산을 경험하긴 했지만, 한국과 같은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워낙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새롭지 않지만, 17년째 기록 경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새 소식이기도 하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1970~1980년대 국가가 앞장서 형법상 불법인 인공임신중절 시술까지 '월경조정술 사업(일명 MR 사업)'을 통해 비용 지원을 해줌으로써 어떤 해에는 63만여 태아가 사라져 버리는 놀라운 인구정책적 성과에 여전히 도취하여 저출산 현상에 대응해 온 결과이다. 1978년 기혼여성만 대상으로 국책연구원인 당시 가족계획연구원이 확인한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63만 1천 건이었다. 그해 출생아 수 100명 대비 낙태아 수가 84명인 셈이었다. 산아제한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피임 및 낙태 등 온갖 정책적 개입 수단을 투입하여 산출로서 낮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 감소를 얻어 내기 위한 시도가 정책효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투입-산출'식 인구정책적 접근은 윤리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투입'이 갖는 속성으로 인하여 '산출'로서 출산율과 인구증가율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곧장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피임 실패로 인한 임신은 시술로써 즉시 임신 중단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 투입-산출 구도에 매몰된 인구정책적 접근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순간의 피임이나 낙태와 달리 출산의도는 매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됐든 주거가 됐든 혹은 교육비용이 됐든 하나 혹은 몇몇 분야에서 지원을 늘리고 확대한다고 해서 당장 출산의도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가?

성평등 사회로의 출발

백가쟁명식으로 저출산 요인을 놓고 논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아이를 남자가 낳을 수 있나? 언젠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출산의도를 높여야 한다. 그런데 여성의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자.

남성 육아휴직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한 남성들이 지금 한국사회 모든 영역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남성 육아휴직도 가능해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확대되었지만, 결정할 수 있는 위계서열의 상층부에는 '남성=돈 버는 가장, 여성=가사 · 돌봄 담당자'라는 성별역할분리 관념이 확고한 중장년 남성이 포진하고 있다. 남녀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에 적대적 직장 문화, 그로 인한 취업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은 현 세대 젊은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아이 낳으면 너만 손해야."

독박육아의 고달픔과 경력단절의 고비를 간신히 넘어선 여성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은 '유리천장'이다.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던 차별의 문턱에서 여성이 좌절하는 사회적 현상이 존재한다. 물론 각 분야에 새롭게 진입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면 언젠가 상층부에서도 여성의 존재감이 커지고 따라서 유리천장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미투 운동'은 여성의 단순한 수적 확대가 가부장적 위계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 젠더폭력의 공포가 만연된 사회에서 아이를 낳을 생각은 대단한 용기의 표현일 수 있다.

Gender Equality

성평등을 토대로 한 삶의 질 향상

기존 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 확실한 정책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난임부부 시술지원에 집중 투자' 등 투입-산출의 덫에 빠진 정책적 접근으로는 여성을 설득할 수 없다. 사실 사회현상으로서 저출산은 여러모로 문제일 수 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서 출산 기피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문제가 아닌) 개별적 출산 기피의 집합으로서 저출산 현상을 문제로 보는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출산하지 않는 여성을 비난하는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새롭게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아이 낳으라"는 메시지를 직접 던지는 접근을 포기하는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이다. 삶의 질을 높여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면 출산의도가 저절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평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삶의 질 향상은 의미가 없다. 삶의 질은 '객관적 삶의 조건(물질적 생활수준)과 주관적 만족도(행복)'의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구성하는 개념이다.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의료보장을 아무리 확실히 한다 하더라도 성평등이 빠져서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면 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그렇지 않든, 성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여성이 갖도록 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비전 제시부터 공용 화장실 개조에 이르기까지 거시적·미시적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재정과 정보

통합화, 표준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신뢰성 있는 재정 통계로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지원합니다

이슈포커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변화: 2006-2020

보이지 않는 혁신, 4차 산업혁명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최저임금

해외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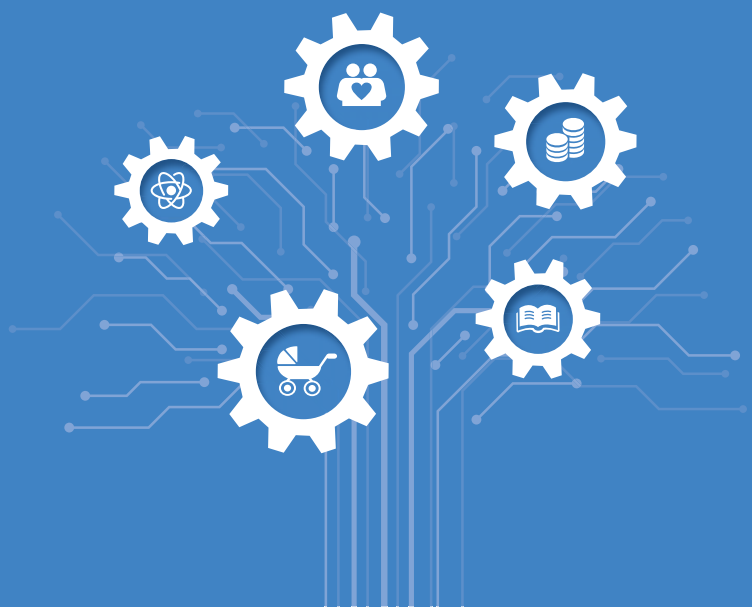
캐나다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 특징과 경제 · 재정 전망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세계를 제패한 영국의 국가 프로젝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변화 : 200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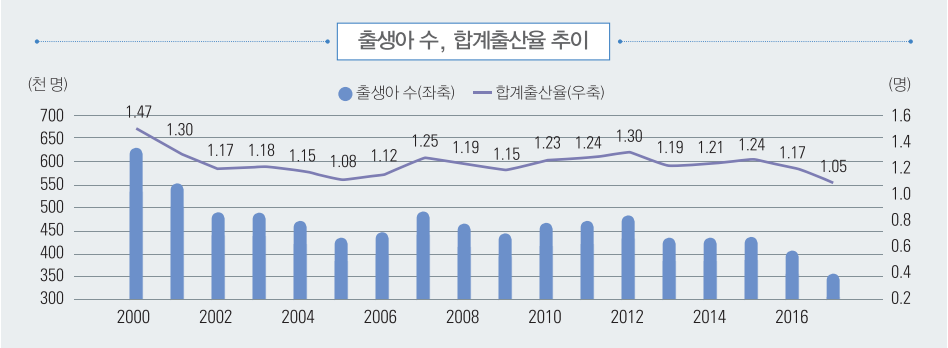
김선옥
재정통계분석팀 부연구위원
sokim@kpfis.kr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책을 세우고 대응해 왔다. 특히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국에 진입한 이후, 출산율을 높이고자 2006년부터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020년까지 약 19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출산율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2017년에는 출산율이 1.05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과 정책 변화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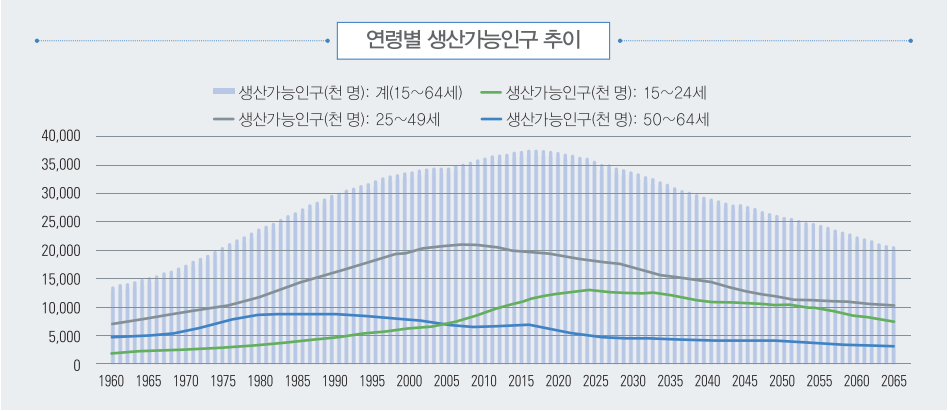
저출산 현황과 저출산 대응 필요성

우리나라 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감소폭이 더욱 커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약 35만 8천 명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지고 가임기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05명을 기록하였다. 2005년 역대 출산율 최저치인 1.08 쇼크 이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저치를 갱신한 것이다.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저출산 상황의 지속은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자연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인구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의미하며 노동력 부족 국가로 진입이 예상된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2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하고, 이후 감소세가 확대되어 2065년에 2,06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인구구조에 있어서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1], 저출산으로 인하여 1인가구의 형태가 증가될 전망이다.



주: 2016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경제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근로자의 평균노동연령을 높이고,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력을 하락시킨다. 그리고 저출산 및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의료 및 노인부양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빠른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 야기가 우려된다.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7%)에 진입 → 2018년 고령사회(14%) → 2025년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이 같은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을 제정하고, 2005년 9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초저출산에 대응했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인 정책의 추진방향은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발전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06~2010년에는 저출산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2011~2020년에는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에서 19.7조 원, 제2차 기본계획에서 60.5조 원이 투입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5년간 108.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성과

	제1차 기본계획 2006~2010	제2차 기본계획 2011~2015	제3차 기본계획 2016~2020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 사회 구현	•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추진 목표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점진적 출산율 회복	•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 OECD 국가 평균 수준 출산율 회복 * 합계출산율 증대: ('14) 1.21명→('20) 1.5명
정책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 일·가정 양립 일상화 • 결혼, 출산 부담 경감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청년일자리·주거 대책 강화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예산	• 19.7조 원	• 60.5조 원	• 108.4조 원
주요 추진 성과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율 증가 * ('05) 21.9%→('10) 42.0% 육아휴직제도 이용율 증가 * ('05) 26.0%→('10) 50.2%	• '13년부터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시행 * 보육료 지원 아동 수 ('06) 68만 명→('14) 148만 명 * 양육수당 수혜 아동 수 ('09) 68만 명→('14) 101만 명	• 청년고용 활성화,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 정책 추진 중
평가	• 1차 기본계획의 추진으로 급격한 하락 추세는 완화됨 * ('05) 1.08명→('10) 1.23명 • 정책이 보육 지원 부문에만 편중되었고,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낮은 것은 한계로 지적됨	• 출산율이 하락하지는 않았으나, 초저출산 현상 지속 * ('10) 1.23명→('15) 1.24명 • 양육비 지원 등 미시적 지원 위주에서 저출산 현상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구조, 문화에 대한 거시적 대책 마련 필요	•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최저 출산율을 기록 * ('15) 1.24명→('17) 1.05명 • 만혼·비혼 대책,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냄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제2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됐다. 저출산 기본법에는 인구정책 및 교육,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시행을 담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하락 추세 반전을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 가족 친화 사회문화 조성 및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추진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제1차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액 규모

(단위: 조 원)

총 19.7

2006	2007	2008	2009	2010
2.1	3.1	3.8	4.8	5.9

주: 지방비 포함, 각 연도 예산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차 기본계획 주요 추진 과제 내용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 신혼부부 출발 지원
-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모성보호 강화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 빈곤아동의 자활·자립 지원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총 96개)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했다.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출산·양육 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율이 2005년 21.9%에서 2010년 42.0%로 증가하였고,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이 2005년 26.0%에서 2010년 50.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정책적 고려 및 정부의 역할 강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 부족은 한계로 지적됐다.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2006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 만 3~4세아 차등보육·교육비 지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까지) 및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만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
- 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 방과후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1,100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 수강권 바우처 지급(10만 명)
-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150개소), 직장보육시설 확대
  - 민간보육시설 영아(0~2세)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확대,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2,000명)
- 모성 및 영유아 건강 관리 체계화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00%) 등

2007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추진→2008년 도입
  -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50개월
- 아동복지교사,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스타트 등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신규사업 추진

200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의 범위 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 요건 완화: 만 1세→만 3세 미만으로 확대 ('08.1.1. 이후 출생아부터)
  - 육아휴직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009

- 무상보육·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시설미이용 아동 육아수당 지급, 육아휴직급여 활성화 등

2010

-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두 자녀 이상 소득하위 60%→70%)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각 연도 시행계획(중앙부처)

제2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1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고려하여 교육홍보 강화 및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사회 각 부문에 확산하고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제2차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액 규모

(단위: 조 원)

총 60.5

2011	2012	2013	2014	2015
7.4	11.0	13.5	13.9	14.7

주: 지방비포함, 각 연도 예산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주요 추진 과제 내용

일·가정 양립 일상화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 가족친화적인 직장·사회 환경 조성 등

결혼, 출산 부담 경감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난임부부 지원확대
-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확대 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드림스타트 활성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 중장기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총 95개)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추진을 통하여 보육 인프라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2013년부터는 영유아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2006년 68만 명에서 2014년 148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양육수당 수혜 아동도 2009년 68만 명에서 2014년 10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의료비 보장성 확대, 고운맘 카드 도입 등 임신 · 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됐다.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2011
- 보육 교육비(만 0~4세) 전액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50% 이하→70% 이하), 만 5세 아동(소득하위 70% 이하),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다문화가정은 전액지원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및 단축급여 도입으로 육아휴직 기회 확대 및 경력단절 방지

201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등 일·가정 양립 강화 제도개선 시행(8월) 대비 하위법령 개정, 제도 활용이 확산되도록 홍보 강화
  -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기간 확대, 기간제·파견 근로자 육아휴직 활용 촉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가족돌봄휴직 의무화
  -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유·사산 보호휴가 범위 확대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지원 확대 등

2013
- 만 0~2세 및 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만 3~5세 대상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 및 보육·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확대 등에 대한 실행계획 마련
-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 강화, 노사정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근로시간 단축 강화,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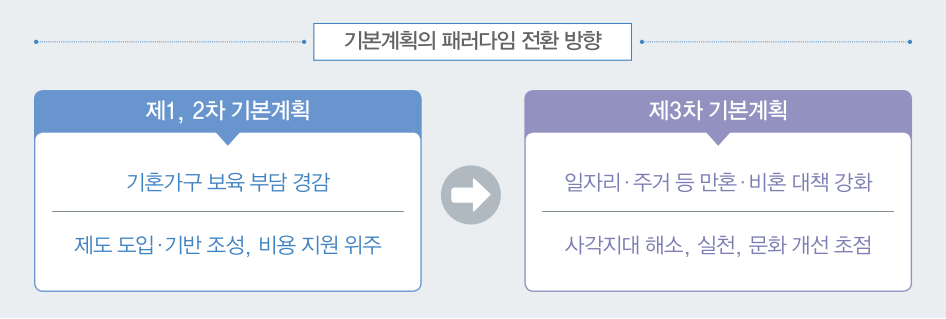
2014
-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을 위해 컨설팅·인건비 지원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13년 3,571명, 106억 원→'14년 5,030명, 227억 원)

2015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15년 목표: 국·공립 신축 15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300개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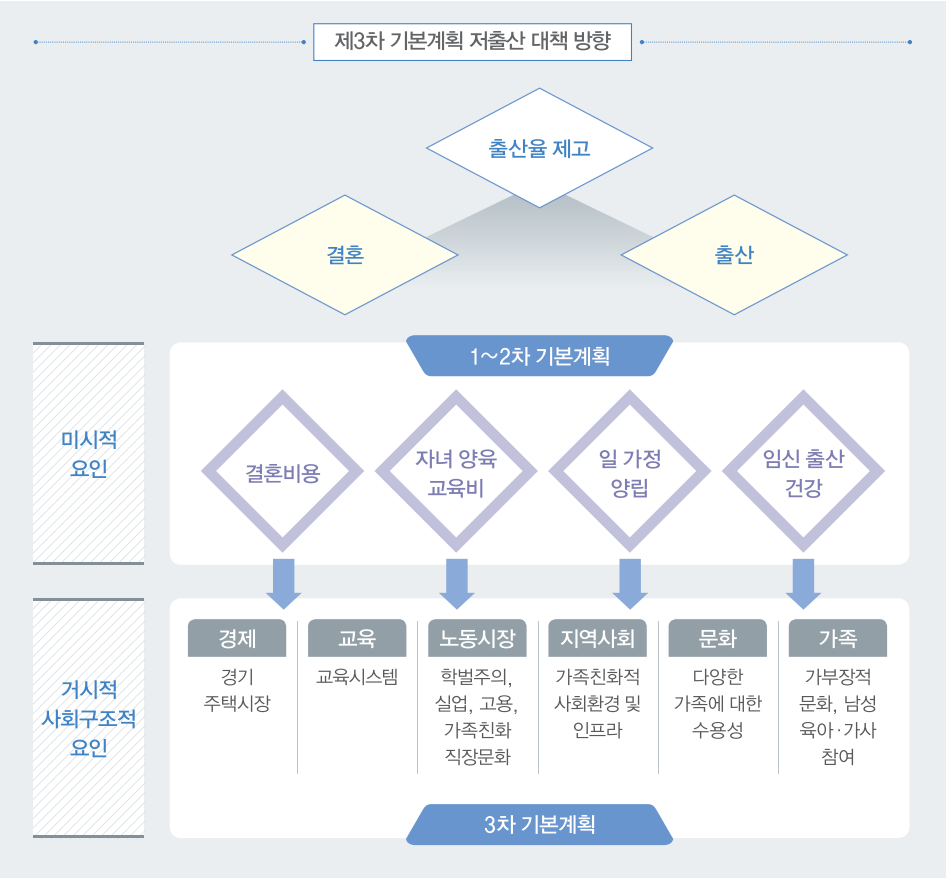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각 연도 시행계획(중앙부처)

제3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도입과 기반 조성, 비용 지원 위주에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1차, 2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한 미시적인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2016년~2020년까지 208.4조 원의 예산 투입이 예정된 가운데 제3차 기본계획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 사회구조적 대책을 강화, 보육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과 교육, 양성평등, 육아 등으로 접근의 범위를 확대, 결혼의 장애 요인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 기존에 추진한 저출산 대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접근성 향상, 장시간 근로 관행 해소와 양성평등 관점의 일·가정 양립 등 사회문화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액 추계

(단위: 조 원)

총 108.4

2016	2017	2018	2019	2020
20.5	21.7	21.8	22.0	108.4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주요 추진 과제 내용

청년일자리·주거 대책 강화
- 청년고용 활성화
-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 포용적 가족 형태 인식 확산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
- 맞춤형 보육·돌봄 확대
-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개혁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 양립
-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저출산 대책(총 81개)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2016

- 노동개혁 5대 입법(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16.1.) 이행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평가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 보급
-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확대
- 종일반 중심의 보육 지원체계를 종일반, 맞춤반, 시간연장, 시간제 보육반으로 다양화(7월~)

2017

- 고용디딤돌 7천 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3.9만 명 자산형성 추가 지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16만 명 지원 등 다각적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추진
- 청년임대주택 7천 호 공급,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1만 호 추가 확대 등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2018 보건복지부 수행예정 사업

- 아동수당 신설(0~5세 아동, 월 10만 원)
-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확대(2만→3만 호)
- 육아휴직 급여 인상(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40%→80%)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8년 450개소 추가) 등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각 연도 시행계획(중앙부처)
관계부처합동 발표자료, "2018년 경제정책방향"(2017.12.12.)

저출산 추진 정책의 재구조화 방향

2006년~2020년까지 3차에 걸쳐 188.6조 원이 투입되는 등 저출산 관련 사업 추진과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재구조화 방향을 논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낮은 출산율은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국민 전반적인 삶의 질 악화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경제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돌봄 책임, 교육 및 초등 돌봄의 공백, 주거 정책 등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꼽았다(제1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재구조화의 방향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인구변화 추이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향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개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일 것이다. 이미 초저출산을 경험한 국가들의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을 보면 프랑스가 21년(1993년 1.66명에서 2014년 1.98명), 스웨덴이 15년(1999년 1.50명에서 2014년 1.91명)이 걸리는 등 저출산 대응은 사회전반적인 인식 및 문화가 바뀌도록 장기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관계부처합동 발표자료. "2018년 경제정책방향". (2017.12.12.).
- 대한민국 정부. 제1차, 2차,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대한민국 정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2006~2017년 각 연도별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방안」. 정책보고서 2009-89.
- 보건복지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1.1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저출산 고령화 포럼, 저출산·고령사회 재구조화 방향 논의". (2018.3.15.).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인구통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2018.4.2. 다운로드).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2018.4.2. 다운로드).

보이지 않는 혁신, 4차 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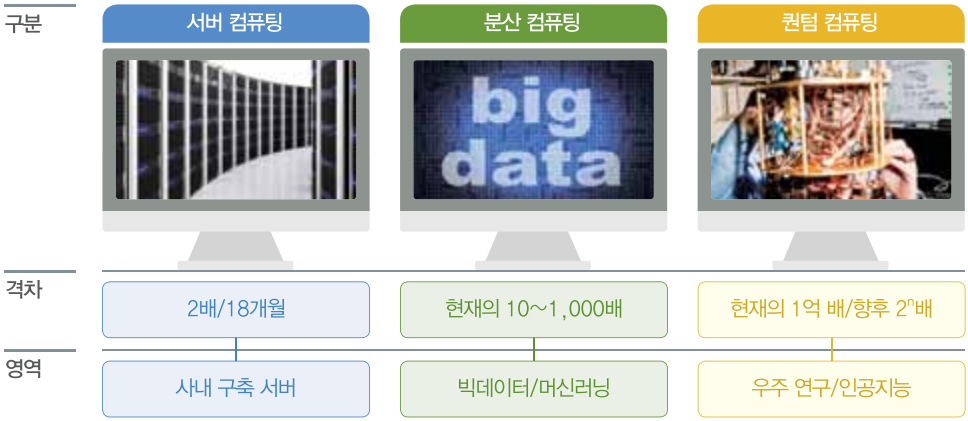
박지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장
jihop@microsoft.com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변화할 수 있다. 현재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거나, 정확히 보았어도 그 실체를 명확히 알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체를 명확히 알고, 정확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리더 마인드(leader mind)'를 통해, 실질적으로 "내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고 있다면?"이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 기업들의 상당수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차는 이미 출발해 버렸고, 이를 잡기 위해 어떻게든 쫓아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상당히 위험하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빠르게 쫓아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순간, 변화의 핵심을 놓치고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빠르게 쫓고 있다면 잠깐 멈추어 보자. 그리고 '리더(leader)'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먼저 그려 보자. 그리고 핵심을 이해하고 방향성을 확실히 한 뒤에 한 발자국씩 나아가다 보면 실제로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리더의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 혁신,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보자.

보이지 않는 혁신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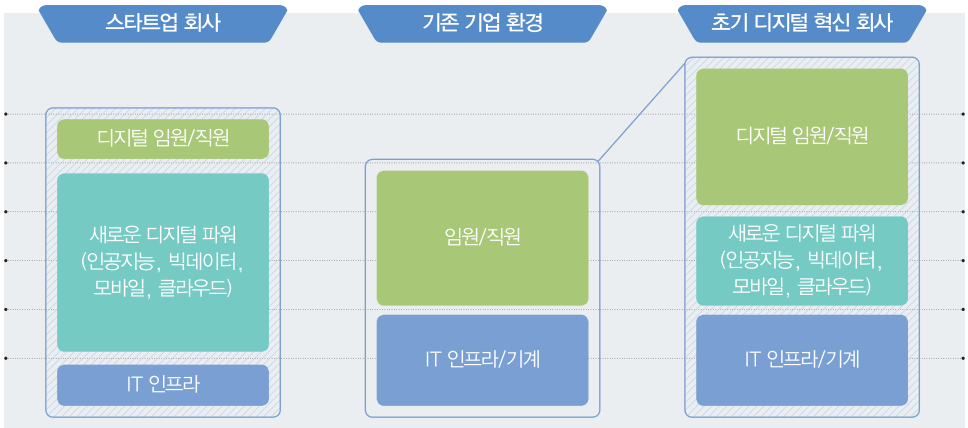
현재 기업들은 빠르고 다양한 고객 요구의 증가, 모듈화로 인한 경쟁 업체의 빠른 추격, 끊임없는 기술 변화로 인해 경쟁 회사 대비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는 이렇게 쉽지 않은 경쟁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만드는 수단 매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리더는 이 '수단 매체'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정보 처리 프로세스의 진화



많은 기업들은 IT 시스템 도입 및 그에 따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현재까지 많은 혁신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그렇게 혁신을 한 뒤 경쟁 기업과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을까? 단순히 IT 시스템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크게 보아도 1년에 2~4배의 차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격차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새롭게 만나는 기업은 새로운 디지털 도구(인공지능, 클라우드의 근간인 분산 컴퓨팅)를 통해 기존 IT 시스템 대비 처리 속도 측면에서 최대 1,000배의 격차까지 만들어 가고 있고,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퀀텀 컴퓨팅이라는 신기술을 통해 최소 1억 배 이상의 격차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 벤치마킹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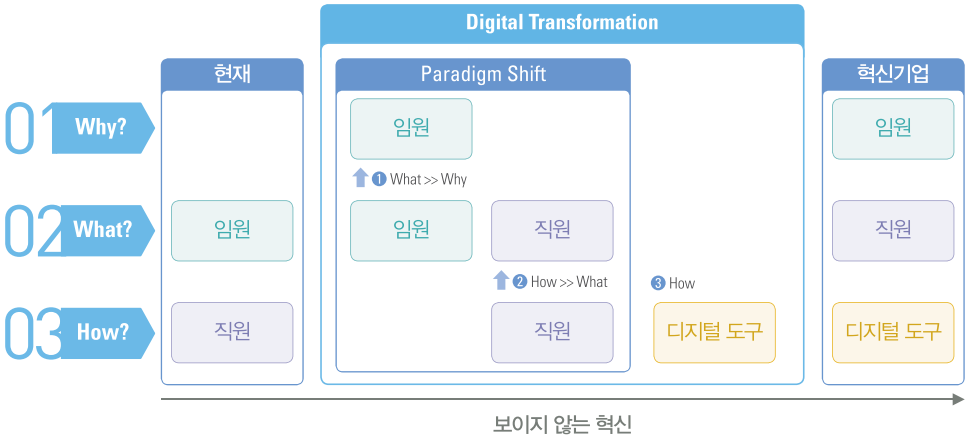
우리의 업무에 1,000배의 격차라는 것을 적용해 보면 누군가는 24시간 걸리는 일을 단 1분 24초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격차로 인해 진정한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클라우드나 인공지능과 같은 강력한 디지털 도구를 기업이 도입만 하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결단코 아니다. 디지털 도구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서비스 업체의 'Azure'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테슬라(Tesla), 알리바바(Alibaba),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등의 해외 혁신 기업을 벤치마킹하면서 가장 먼저 기업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 새로운 디지털 도구들과 업무 프로세스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확산되지 않고 실패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혁신 기업과 우리 기업들을 비교할 때 우리가 놓친 부분이 바로 직원이다. 혁신 기업은 적은 인원이더라도 디지털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큰 경쟁 우위 요소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도구를 적용해도 이를 잘 활용할 수 없는 과거 도구에 익숙한 직원들뿐이다. 이것이 차이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현재 직원들을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잘 활용하는 직원들로 대체해야 할까?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도구를 잘 활용하는 직원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대한민국에는 그 수가 더 적다. 그리고 디지털 도구를 잘 활용하는 직원을 모셔 오더라도 새로운 스타트업이 아닌 기존 비즈니스 영역에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하려면 적응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현재의 직원을 디지털 도구를 잘 활용하는 직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디지털 도구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한다. 이것이 진정한 격차를 만드는 핵심이고 결국은 사람이 경쟁 우위 요소인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기에 그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 우위 측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모르는 기업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직원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전사적 관점에서 본 '보이지 않는 혁신'

현재 일반적인 기업에서 임원은 무엇을(What?) 해야 돈을 벌 것인가를 고민하고, 직원은 이를 어떻게(How?) 효과적으로 비용을 낮추면서 고품질로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How?) 영역은 정형화된 알고리즘에 특화된 디지털 도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쟁 우위를 위해 어떻게(How?) 위치에 디지털 도구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면 직원과 디지털 도구의 역할이 충돌하게 된다. 이것이 기술만 도입하는 기업들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이다. 디지털 도구가 기업 내로 도입되면, 임원과 직원 모두가 변해야 한다. 임원은 회사의 방향성에 맞도록 직원과 공감하는 왜(Why?) 영역으로, 직원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What?) 영역으로 각각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일어나야 한다. 결국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정을 통해 최종 디지털 도구와 왜(Why?)-무엇을(What?)-어떻게(How?) 영

전사적 관점에서 본 '보이지 않는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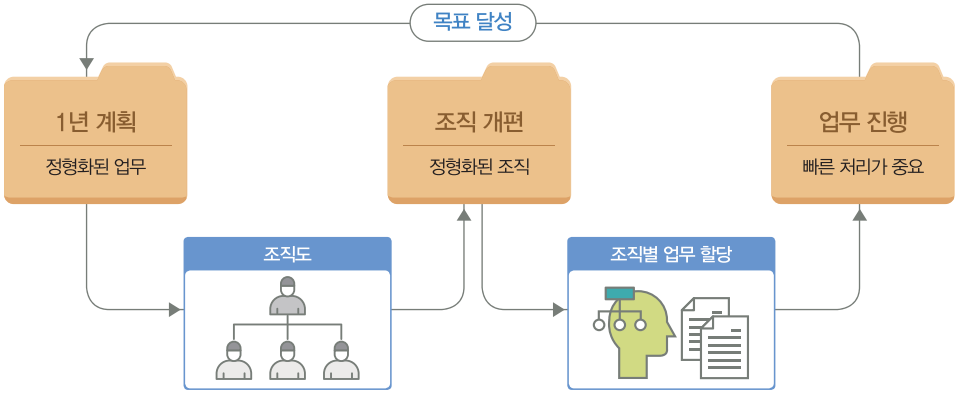


역이 제 자리를 찾아갈 때 기업은 혁신 기업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이 실제 우리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살펴보자.

조직의 관점에서 본 '보이지 않는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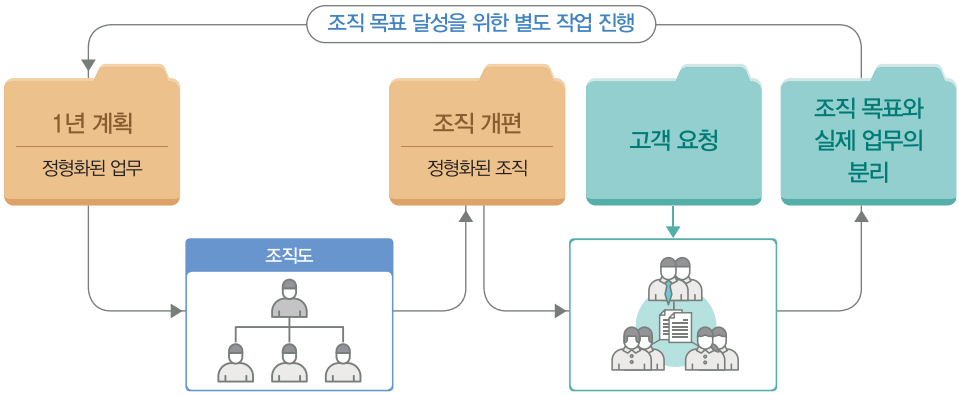
디지털 임원/직원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 임원/직원의 현황을 이해하고 디지털 임원/직원으로 변화해 가기 위한 조직 구조의 변화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현재의 일반적 기업 조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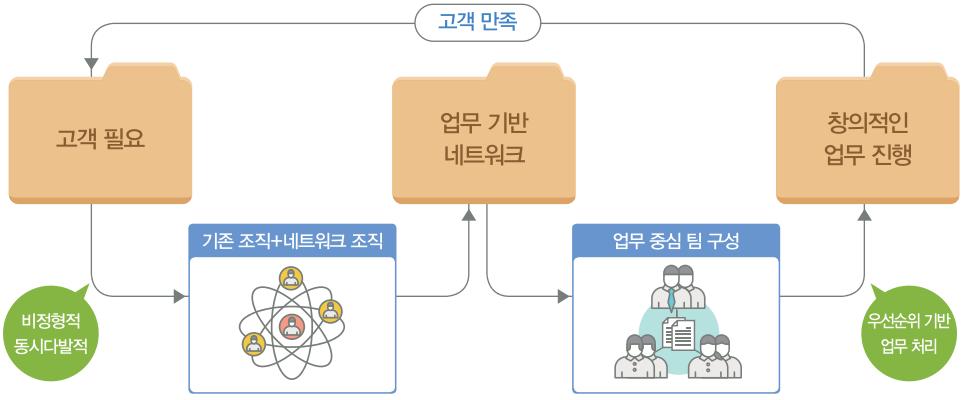
현재 일반적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구조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직 개편을 하고 이를 각 조직에 업무 할당을 하고 최종적으로 할당된 업무를 완수하거나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목표 달성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기존 조직 구조에서 고객 요청 처리 시



하지만 불확실한 환경에서 고객의 빠르고 다양한 요청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조직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대부분 기업이 현재의 조직에서 큰 변화 없이 고객 요청을 그대로 받아 처리하게 한다. 이 경우 세 가지의 큰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조직이 고객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아 고객 요청에 대해 조직의 목표와 별도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둘째, 조직이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목표를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객 요청 외에 목표를 위한 부수적인 일을 함으로써 조직의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셋째, 분리된 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여 어쩔 수 없이 야근과 주말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직원의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가 공감 없이 실행을 강조했을 때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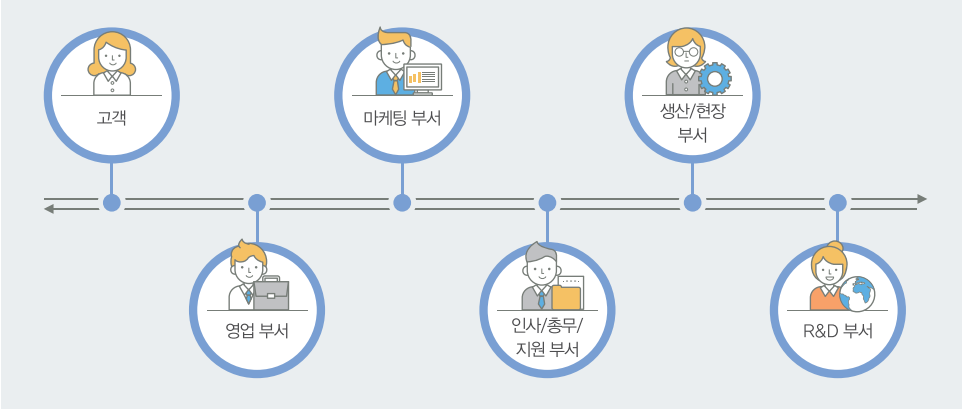
디지털 전환 이후의 고객 요청 처리 프로세스



그렇다면 임원과 직원 모두가 공감을 한 상태라면 조직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현재 불확실성의 중심은 고객이다. 즉, 고객의 비정형적이며 동시다발적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의 중심축에 고객을 먼저 놓고 시작을 해야 한다. 하지만 비정형적인

요청에 맞추어 조직을 미리 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 조직은 최소한 유지하되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업무기반의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객이 요청한 내용은 고객 접점의 마케팅 부서나 영업 부서의 담당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케팅 부서와 영업 부서, 개발 조직, 지원 조직 등 회사 전반에 걸쳐 해당 정보가 흘러가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요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 중심의 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실질적 업무 중심의 'End to End' 네트워크



이렇게 될 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정보를 'End to End'로 공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재의 내 업무 영역을 넘어 일에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고객의 요청에 어떻게 창의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이 부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력은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이다. 직원 스스로가 "나는 개발 부서의 김 과장이 아니라 이 회사의 김 과장"이라고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이 공감을 통해 확산될 때 실질적인 업무 중심의 네트워크가 시작된다. 그 네트워크가 정보를 공유케 하고 부서를 넘어서는 업무에 참여하게 되고, 회사의 방향을 현실화시키는 고객의 요구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도구를 통해 직원과 직원을 연결시키고, 업무에 참여시키고, 우선순위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가시화하고 관리하며, 고객의 필요를 채우며 고객 만족을 시키는 기업이 진정한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혁신을 위한 외침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일단은 잠시 멈추어 보자. 그리고 위에 언급된 보이지 않는 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경영, 조직, 업무 환경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기업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혁신으로 진행되는지 리더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보이는 만큼 한걸음씩 걸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을 걷자. 이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2018년 2월 중 총수입은 26.6조 원, 총지출은 40.7조 원이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77.4조 원으로 진도율은 17.3%이고 전년 동기 대비 4.1조 원 증가(진도율 동일)하였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76.5조 원으로 진도율은 17.8%이고 전년 동기 대비 7.2조 원 증가(진도율 0.9%p 상승)하였다.

표 1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

	2017년											2018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총수입 (진도율)	73.3 (17.3)	113.4	163.1	196.0	223.2	267.2	299.4	329.6	372.4	399.2	430.6	50.8	77.4 (17.3)
총지출 (진도율)	69.3 (16.9)	117.3	154.0	184.8	225.4	251.1	282.0	317.0	345.2	370.0	406.6	35.8	76.5 (17.8)
통합재정수지	4.0	−3.9	9.1	11.3	−2.2	16.1	17.4	12.7	27.2	29.2	24.0	15.0	0.9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1	10.2	14.0	18.3	21.9	24.4	27.6	31.2	34.6	37.9	42.5	2.5	4.8
관리재정수지	−1.1	−14.1	−5.0	−7.0	−24.1	−8.3	−10.2	−18.5	−7.4	−8.8	−18.5	12.6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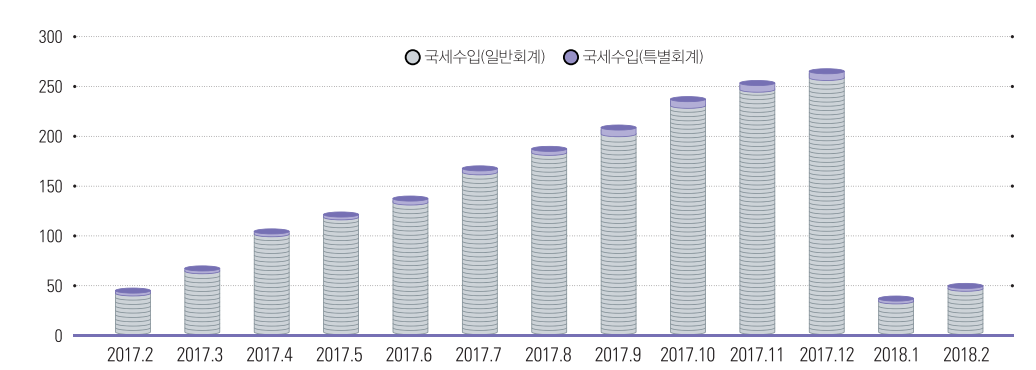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국세수입은 2018년 2월 중 소득세 8.1조 원, 교통세 1.2조 원 등의 증가로 전월 대비 13.4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1월과 2월 누적 국세수입은 49.9조 원이며, 일반회계 48.4조 원과 특별회계 1.5조 원으로 구성된다.

그림 1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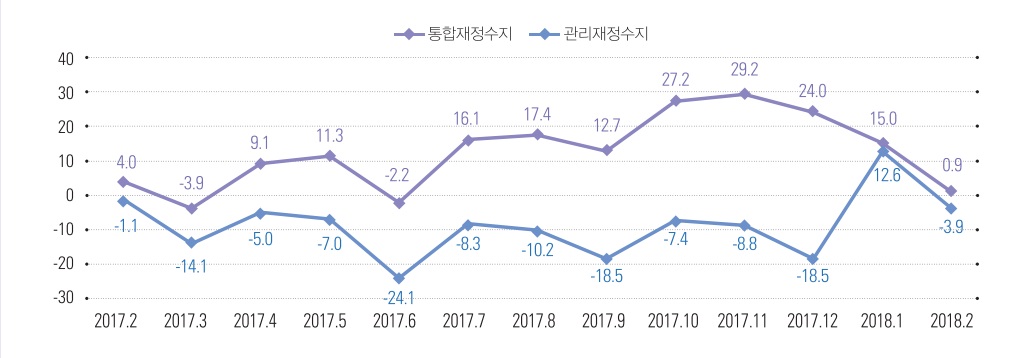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총 국세수입	46.2	69.9	105.3	123.8	137.9	168.7	189.5	207.1	236.9	251.9	265.4	36.6	49.9
일반회계	45.1	68.3	102.6	120.8	134.6	164.4	184.8	202.0	231.0	245.7	258.5	35.4	48.4
특별회계	1.2	1.5	2.7	3.0	3.3	4.4	4.8	5.1	6.0	6.3	6.9	1.2	1.5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0.9조 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4.8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1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2.8조 원 악화되었다.

그림 2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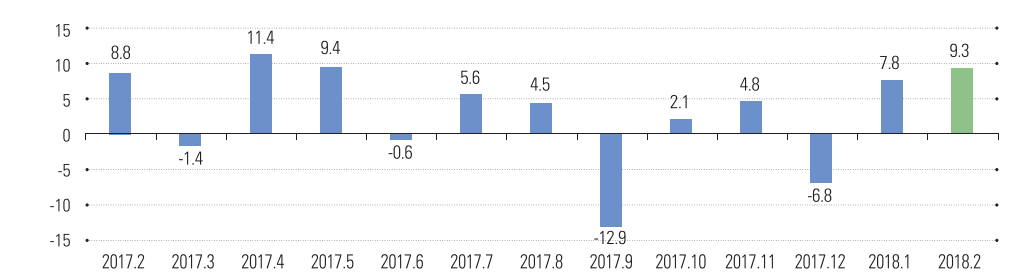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중앙정부 채무

2018년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44.5조 원이다. 순차입액은 국고채권 발행 증가(8.7조 원), 국민주택채권 발행 증가(0.5조 원) 등으로 전월 대비 9.3조 원 증가하였다. 2017년 2월과 비교할 때 월별 순차입액은 0.5조 원 증가하였다.

그림 3 월별 순차입 및 누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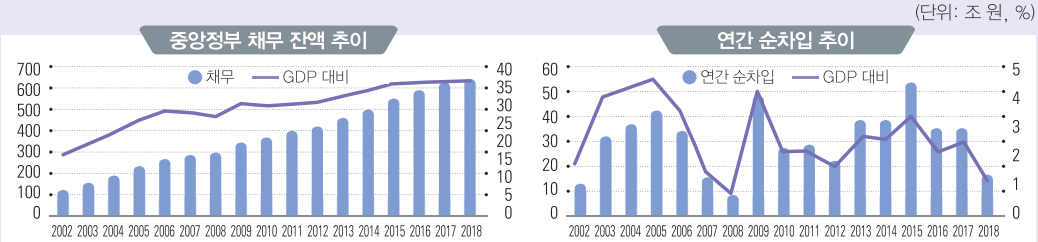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월별 순차입	8.8	−1.4	11.4	9.4	−0.6	5.6	4.5	−12.9	2.1	4.8	−6.8	7.8	9.3
연간 누계	19.4	18.0	29.4	38.8	38.2	43.8	48.3	35.4	37.5	42.3	35.4	7.8	17.1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그림 4 중앙정부 채무 추이

(단위: 조 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적 채무	289.1 (27.7)	297.9 (27.0)	346.1 (30.1)	373.8 (29.5)	402.8 (30.2)	425.1 (30.9)	464.0 (32.5)	503.0 (33.9)	556.5 (35.7)	591.9 (36.1)	627.4 (36.3)	644.5 (36.5)
연간 순차입	15.9 (1.5)	8.8 (0.8)	48.2 (4.2)	27.7 (2.2)	29.0 (2.2)	22.3 (1.6)	38.9 (2.7)	39.0 (2.6)	53.5 (3.4)	35.4 (2.2)	35.4 (2.5)	17.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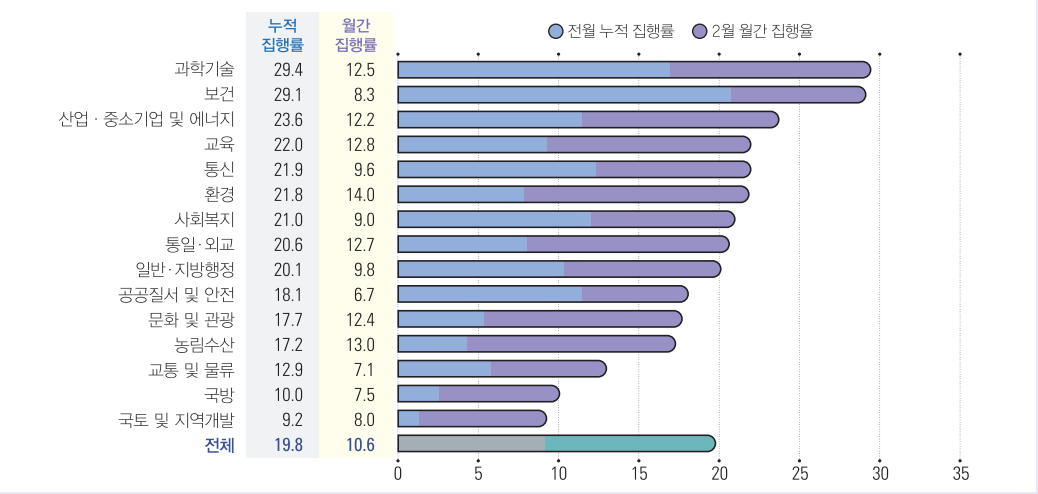
주 1) 괄호 안은 GDP 대비 비중
2) 2018년 GDP는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3) 지방정부 채무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2018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앙부처 예산 238.6조 원 대비 2월 말까지 47.1조 원을 집행하여 연간 계획 대비 19.8%를 집행하였다. 월별 집행율은 1월(9.2%)보다 높은 10.6%이다. 2월 기준 월간 집행률은 환경(14.0%), 농림수산(13.0%), 교육(12.8%) 분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월까지의 누적 집행률은 과학기술(29.4%), 보건(29.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23.6%), 교육(22.0%) 분야 등의 순이었다. 교통 및 물류(12.9%), 국방(12.9%), 국토 및 지역개발(9.2%) 분야 등은 2월까지 누적 집행률이 낮다.

그림 5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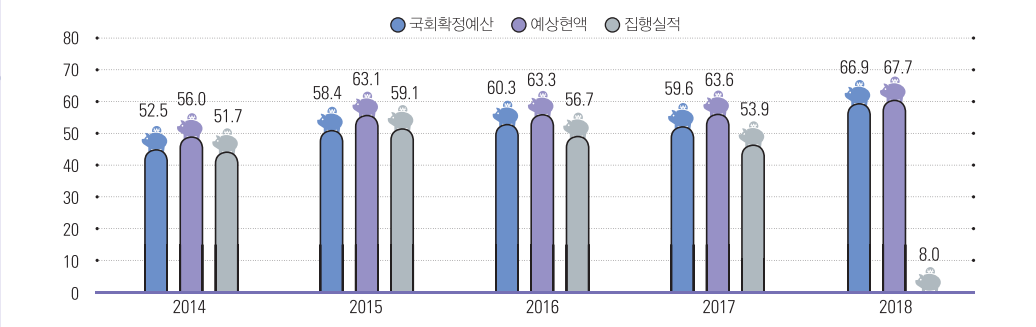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조금

2018년 국고보조금 예산(본예산 기준)은 66.9조 원으로 전년도 예산 59.6조 원에 비해 약 7.3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예산현액은 67.8조 원이며, 2월 누적 실집행실적은 8.0조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9% 집행되었다.

그림 6 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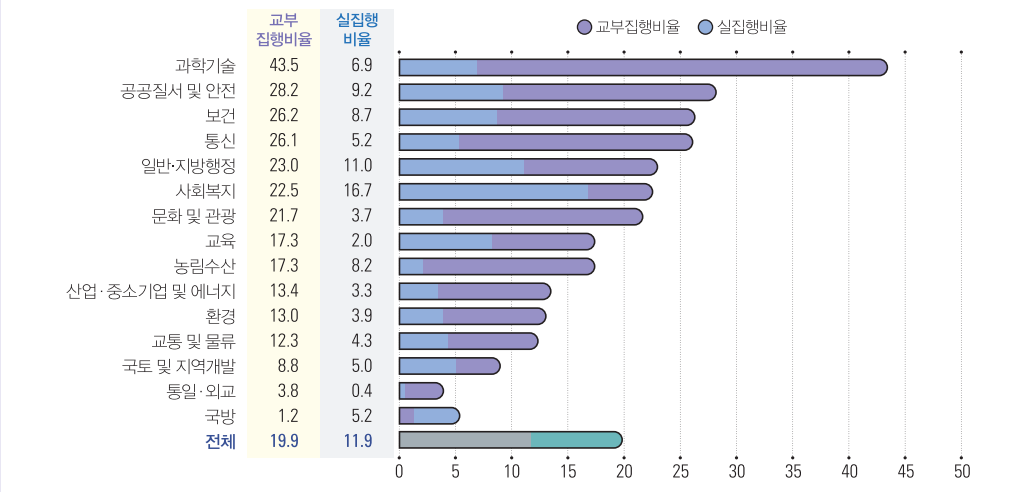


주: 2018년 집행 실적은 2월까지의 누적 실집행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분야별로 사회복지(6조 3,290억 원), 농림수산(7,586억 원), 환경(1,737억 원), 문화 및 관광(1,532억 원), 보건(1,335억 원) 분야 등의 순으로 국고보조금이 실집행되었다. 교부집행률은 과학기술 분야가 43.5%로 가장 높지만, 실집행률은 사회복지 분야가 16.7%로 가장 높다.

그림 7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률(2018년 2월 누적기준)

(단위: %)



	교부 집행비율	실집행 비율
과학기술	43.5	6.9
공공질서 및 안전	28.2	9.2
보건	26.2	8.7
통신	26.1	5.2
일반·지방행정	23.0	11.0
사회복지	22.5	16.7
문화 및 관광	21.7	3.7
교육	17.3	2.0
농림수산	17.3	8.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4	3.3
환경	13.0	3.9
교통 및 물류	12.3	4.3
국토 및 지역개발	8.8	5.0
통일·외교	3.8	0.4
국방	1.2	5.2
전체	19.9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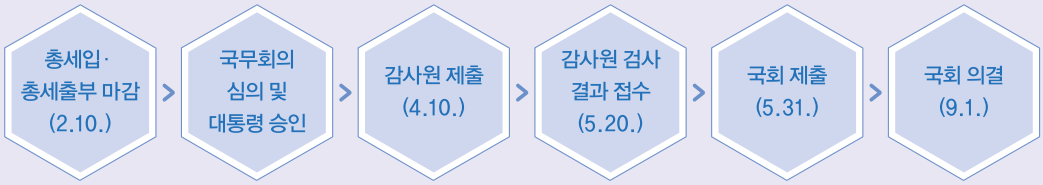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2. 2017년도 국가결산

정부는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2017회계연도 국가회계결산 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국가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이다. 2017년 국가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2월 10일에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했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감사원에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감사원의 회계감사 결과를 정부가 5월 20일에 접수한 후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정기회 하루 전까지 의결을 통해 결산을 종료한다.

그림 1 국가회계 결산 절차



주: 괄호 안은 법정 기한을 의미

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와 성과 보고서로 구성된다.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첨부된다.

총수입·총지출

총수입과 총지출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기금 수입·지출을 모두 합산한 뒤 내부거래와 보전거래[1]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2017년도의 총수입은 430.6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8조 원이 증가했다. 총지출은 406.6조 원으로 2016년보다 21.6조 원 증가했다.

1 보전거래는 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 재정활동 결과 발생하는 금융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재정 규모 및 수지 집계에서 제외한다.

표 1 총수입 · 총지출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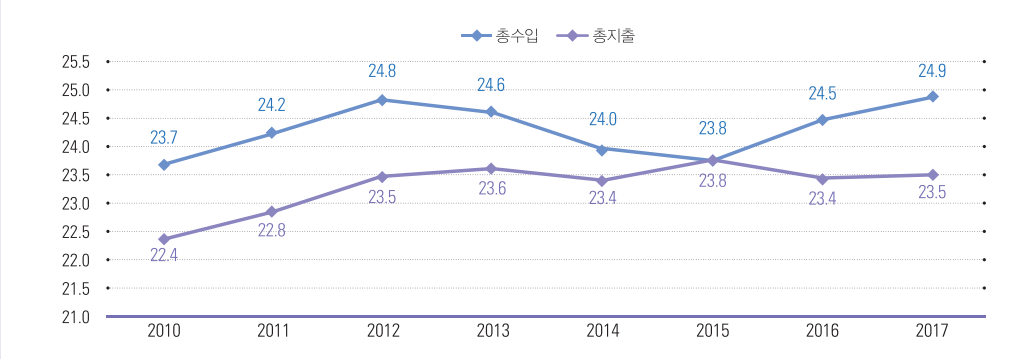
(단위: 조 원)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2017년		증감	
				예산	결산 (A)	예산 (B)	결산 (C)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총수입	국세수입	205.5	217.9	232.7	242.6	251.1	265.4	22.8	14.3
	세외수입	24.6	23.7	27.2	23.5	26.4	25.5	2.0	−0.9
	기금수입	126.2	130.2	141.1	135.6	145.6	139.5	3.9	−6.1
	세입세출외[주1)]	0.05	0.05	−	0.13	−	0.14	0.01	0.14
	소계	356.4	371.8	401.0	401.8	423.1	430.6	28.8	7.5
총지출	일반회계	198.2	206.0	221.7	217.1	229.8	225.6	8.5	−4.2
	특별회계	45.5	50.9	49.6	47.6	50.6	49.6	2.0	−1.0
	기금	104.0	115.0	127.3	119.9	129.8	127.3	7.4	−2.5
	세입세출외[주2)]	0.18	0.19	−	0.30	−	4.04	3.74	4.04
	소계	347.9	372.0	398.5	384.9	410.1	406.6	21.6	−3.5

주 1)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입
2)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18.3.26.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4월호

그림 2 연도별 GDP 대비 재정 규모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4월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소득세 · 법인세 등 국세수입과 국채발행수입,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총세입은 359.5조 원으로 2017년 예산보다 9.6조 원이 초과 징수되었다. 총세출은 342.9조 원으로 예산 대비 96.6%가 집행되었다. 국채 우선상환을 5,000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16.2조 원이

다. 이월액은 전년보다 0.1조 원 증가한 4.9조 원이며, 불용액[2]은 전년보다 3.9조 원 감소한 7.1조 원이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3.3조 원 증가한 11.3조 원이며,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다.

결산 대상 67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619.3조 원으로 2016년보다 23.7조 원이 감소했다.

표 2 세입 · 세출 및 기금 결산

(단위: 조 원)

	2014년	2015년	2016년(A)	2017년(B)	전년대비 (B−A)
총세입(A)	298.7	328.1	345.0	359.5	14.5
총세출(B)	291.5	319.4	332.2	342.9	10.7
결산상잉여금(A−B)주)	7.2	8.7	12.8	16.2	3.4
차년도 이월액(C)	8.0	5.9	4.8	4.9	0.1
세계잉여금(A−B−C)	−0.8	2.8	8.0	11.3	3.3
기금 운용규모	537.2	583.2	643.0	619.3	−23.7

주: 「국가재정법」 제90조 1항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상환 5,000억 원 차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18.3.26.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4월호

표 3 20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주1) 규모

(단위: 억 원)

세계잉여금주2)	지방교부세(금) 정산	채무 상환		세입이입 등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100,422	59,762	12,198	8,539	19,923

주 1)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는 ① 지방교부세(금) 정산, ② 정산 후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 ③ 정산 및 출연 후 남은 금액의 30%는 채무 상환에 사용, ④ 추경 편성 활용, ⑤ 다음연도 세입 이입 순임
2) 총 11.3조 원의 세계잉여금 중 특별회계분 1.3조 원은 다음연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18.3.26.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으로 2016년보다 7.1조 원 개선되었다.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 등 세입여건 개선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016년에 비해 0.4%p 개선되었다.

2 불용액 =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총세출−차년도 이월액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3]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8.5조 원 적자로 2016년보다 4.2조 원 개선되었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16년보다 0.3%p 개선되었다.

표 4 재정수지 결산

(단위: 조 원, %, %p)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2017년		증감	
			예산	결산 (A)	예산 (B)	결산 (C)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통합재정수지(A) (GDP 대비, %)	8.5 (0.6)	−0.2 (0.0)	2.5 (0.2)	16.9 (1.0)	13.0 (0.8)	24.0 (1.4)	7.1 (0.4%p)	11.0 (0.6%p)
사회보장성기금수지(B) (GDP 대비, %)	38.0 (2.6)	37.8 (2.4)	41.5 (2.6)	39.6 (2.4)	41.9 (2.5)	42.5 (2.5)	2.9 (0.1%p)	0.6 (0.0%p)
관리재정수지(A−B) (GDP 대비, %)	−29.5 (−2.0)	−38.0 (−2.4)	−39.0 (−2.4)	−22.7 (−1.4)	−28.9 (−1.7)	−18.5 (−1.1)	4.2 (0.3%p)	10.4 (0.6%p)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18.3.26.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4월호

국가 채무는 2016년보다 33.8조 원 증가한 660.7조 원(GDP 대비 38.6%)이다. 2017년 예산 대비 8.5조 원 감소했는데, 세입 실적 개선에 의한 국고채 5.9조 원 감소가 주원인이다.

표 5 국가 채무 결산

(단위: 조 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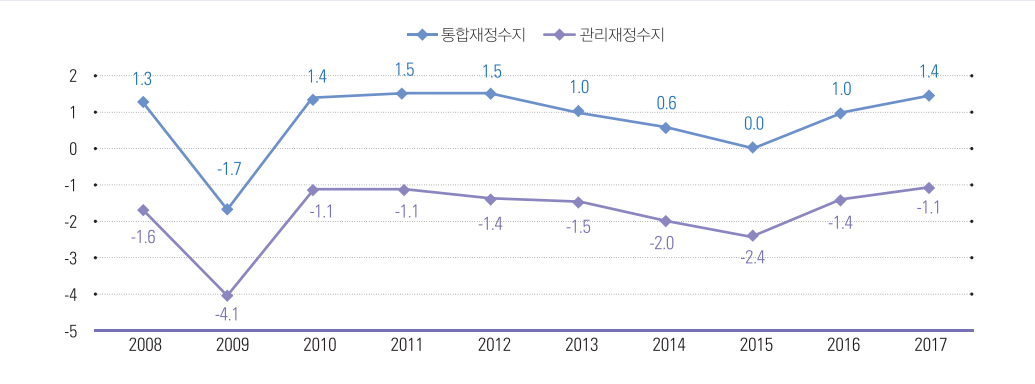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2017년		증감	
			예산	결산 (A)	예산 (B)	결산 (C)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중앙정부(A) (GDP 대비, %)	503.0 (33.9)	556.5 (35.7)	603.2 (37.2)	591.9 (36.1)	633.5 (37.5)	627.4 (36.6)	35.4 (0.5%p)	−6.1 (−0.9%p)
지방정부(B,잠정)주)	30.1	34.9	34.4	35.0	35.7	33.4	−1.6	−2.4
국가채무(A+B,잠정) (GDP 대비, %)	533.2 (35.9)	591.5 (37.8)	637.7 (39.3)	626.9 (38.3)	669.2 (39.6)	660.7 (38.6)	33.8 (0.3%p)	−8.5 (−1.1%p)

주: 지방정부 채무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이후 8월 경 확정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18.3.26.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4월호

3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림 3 연도별 GDP 대비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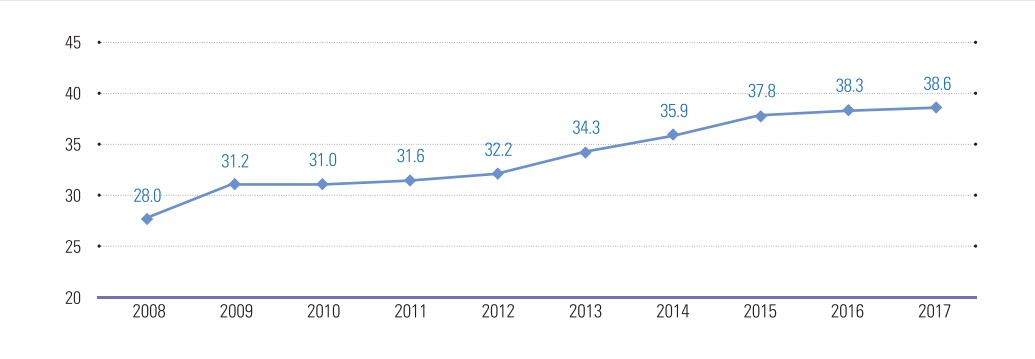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2018년 4월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그림 4 연도별 GDP 대비 국가채무

(단위: %)



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2018년 4월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재무제표와 국유재산

2017년 국가결산 결과 국가 자산은 2,063.2조 원으로 2016년보다 96.4조 원이 증가했다. 2017년 자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기금여유자금 증가 등 유동·투자자산 86.1조 원 증가, 도로 취득 등 사회기반시설 6.7조 원 증가 때문이다.

부채는 1,555.8조 원으로 2016년보다 122.7조 원이 증가했다. 부채 증가의 원인은 국채발행 증가로 인한 국공채 확정부채 20.0조 원 증가, 주택청약저축 5.4조 원 증가,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93.2조 원 증가 때문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07.4조 원으로 전년보다 26.3조 원 감소했다.

표 6 재무결산

(단위: 조 원)

		2014년	2015년	2016년(A)	2017년(B)	전년대비증감 (B-A)
자산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718.5	795.2	878.6	957.1	78.5
	토지·건물 등	1,040.8	1,062.1	1,088.2	1,106.1	17.9
	소계	1,759.3	1,856.2	1,966.8	2,063.2	96.4
부채	국채·주택청약저축 등	569.1	633.3	680.5	710.0	29.5
	연금충당부채	643.6	659.9	752.6	845.8	93.2
	소계	1,212.7	1,293.2	1,433.1	1,555.8	122.7
순자산(자산-부채)		546.6	563.0	533.7	507.4	-26.3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18.3.2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국유재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 2단계로 각각 4,610억 원, 4,164억 원이었다. 국가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1,007억 원이었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취득가액이 353억 원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고속도로 중 재산가치가 높은 도로는 11.2조 원의 경부고속도로, 6.6조 원의 서해안고속도로 순이었다. 물품의 장부가액은 기상청 슈퍼컴퓨터 4호기 352억 원, 관세청 국가종합정보망 운영서버 1호기 327억 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참고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국가채무는 IMF의 1986년 재정통계 국제기준(GFS, 현금주의)과 「국가회계법」 제91조에 근거해 작성되며,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범위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이다. 국가채무는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부채는 2001년 재정통계 국제기준(GFS)에 근거해 작성되며, 국·공채 등 확정부채에 더해 발생주의 부채를 포함한다. 발생주의 부채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군인연금 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등 연금충당부채와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 미래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래 재정부담을 인식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달의 이슈키워드:
최저임금

김상기
재정통계분석팀 연구원
sgkim@kpfis.kr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2018년 2월 한 달 동안 '최저임금'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노동자' 등이 주요 연관어로 도출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부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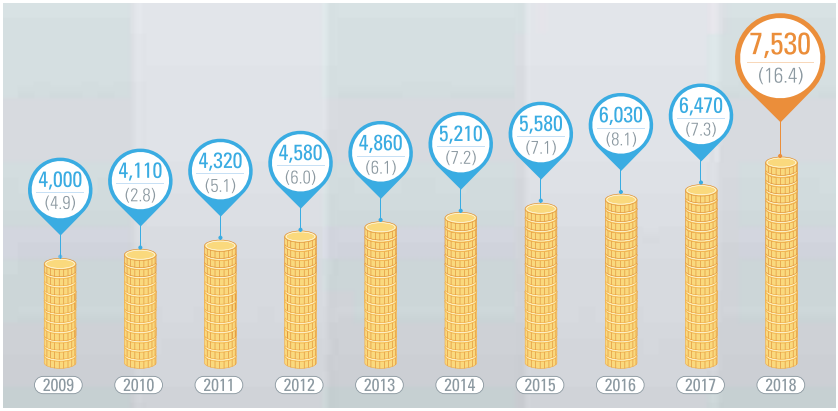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18.3.5.), 수집기간: 2018.2.1.~2.28.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6년에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대비 16.4% 인상되었다.

연도별 최저임금(시간급) 추이

(단위: 원, %)



주: 괄호 안은 인상률임
자료: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2018.3.12.)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정착되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2조 9,708억 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일평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1월에는 3,600명 수준이었으나 2월에는 45,900명으로 약 12.5배 증가하였다. 특히 3월 6일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가 근로자 기준 100만 명(누적기준)을 돌파하였고, 3월 26일 현재까지 44만 개 사업장에서 142만 명(누적기준)의 근로자가 신청을 완료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금액은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190만 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 원 한도)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 금액으로, 보수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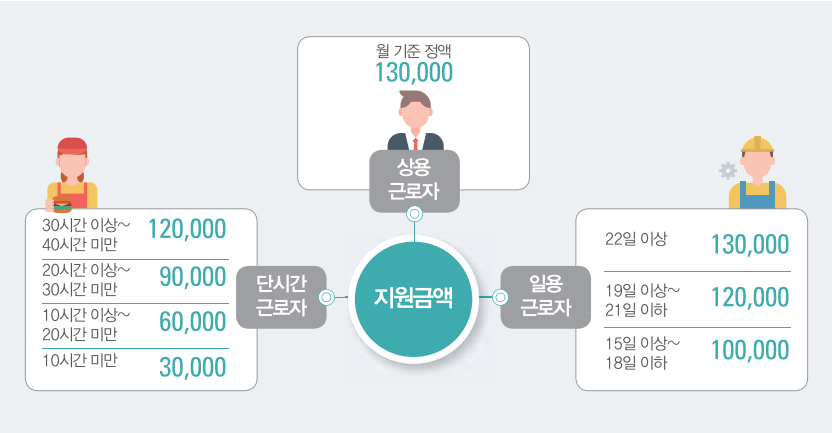
지원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체의 사업주
지원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과세소득 기준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지원대상 제외조건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을 고용하게 된 사업주 •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전년도 보수 수준보다 저하된 근로자 • 고용보험에 따른 추가고용장려금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 사회적기업 · 자활기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근로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상용 근로자는 월 13만 원씩 정액 지급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월 최대 12만 원, 일용 근로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월 최대 13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상용 근로자가 중간에 입사·퇴사·휴직한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일용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

(단위: 원)



주: 월 지급액 기준
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4대사회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및 지원 문의처

- **일자리 안정자금**
  www.jobfunds.or.kr
- **근로복지공단(고용 · 산재보험)**
  total.kcomwel.or.kr Tel. 1588-0075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edi.nps.or.kr Tel.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edi.nhis.or.kr Tel. 1577-1000
-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www.ei.go.kr Tel. 1350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캐나다 2018-2019 회계연도 예산안 특징과 경제·재정 전망

한승희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shhan@kpfis.kr

캐나다 재무부는 평등(Equality)과 성장(Growth)을 핵심가치로 하여 중산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 「Equality Growth: A Strong Middle Class」을 발표하였다(2018.2.27.)[1]. 이번 호에서는 캐나다의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특징 및 경제 · 재정 전망에 대해서 소개한다.

01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의 특징

캐나다[2] 정부는 평등과 성장을 기조로 하여 중산층을 강화하는 것을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의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안에서는 성장(Growth), 진전(Progress), 조화(Reconciliation), 발전(Advancement) 총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예산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과제는 성장(Growth)으로, 고용을 증가시켜 국민들이 중산층에 편입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workers benefit)를 강화하고 아동급여(child benefits)를 확대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2018-2019년 예산안에서는 아동급여를 2018년부터 2022-2023년까지 56억 달러[3]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1 한국의 회계연도(Fiscal Year)는 1월부터 12월이지만, 캐나다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다.

2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2016년 기준 1.53조 달러(USD)로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3629만 명(세계 40위)으로, 경제규모 대비 인구수는 적은 편이다. 1인당 GDP는 2016년 기준 42,158달러(USD)이다.

또한 부모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35주에서 40주로 늘려 제도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1% 세금을 증가시키고, 중산층에게는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공정한 세제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탈세 및 조세회피를 엄중하게 단속하며,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10%에서 9%로 낮추기도 하였다.

두 번째 과제는 진전(Progress)으로, 기술혁신을 위해서 과학자 및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18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총 9.3억 달러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NSERC(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에 5년간 3.5억 달러, CIHR(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에 3.5억 달러, SSHRC(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에 2.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장비 투자를 확대하며, 대학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연구 인프라 전략(Digital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빅데이터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 강화 및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가들이 보다 더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캐나다 내 원주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화(Reconciliation)이다. 원주민 자녀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원주민 여성이 교육이나 일자리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데 5년간 총 41억 달러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원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5년간 15억 달러를 투자하며 원주민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2018년부터 5년간 14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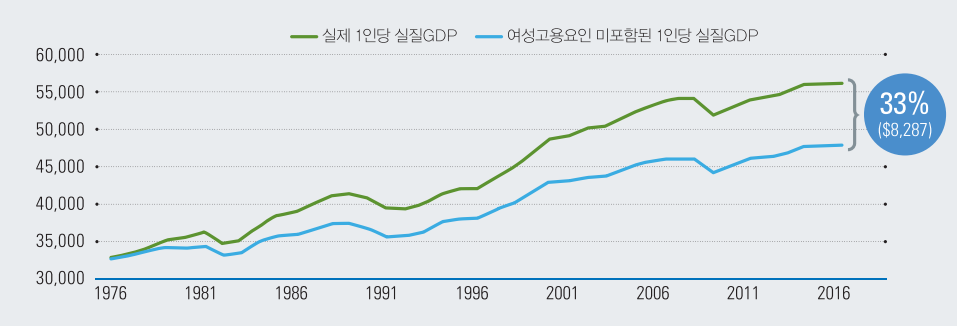
네 번째 과제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발전(Advancement)이다. 캐나다의 자연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27억 달러를 투자하며, 국제적인 여성지원 정책을 위해서 5년간 20억 달러 투자할 예정이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opioid)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간 231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반대로 담배세를 인상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위 네 가지 핵심과제에서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양성평등이다. 캐나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참여 정도도 낮다고 한다. 예산안에서는 이 격차를 줄이고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캐나다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 1〉은 지난 40년 동안 여성의 고용시장에 참여함으로써 1인당 실질GDP 증가의 1/3을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예산안에서는 여성이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중산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3_ 2018-2019 예산안에서 캐나다 달러(CAD)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문의 '달러'는 캐나다 달러를 의미한다.

그림 1 여성의 고용 참여와 1인당 실질GDP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chart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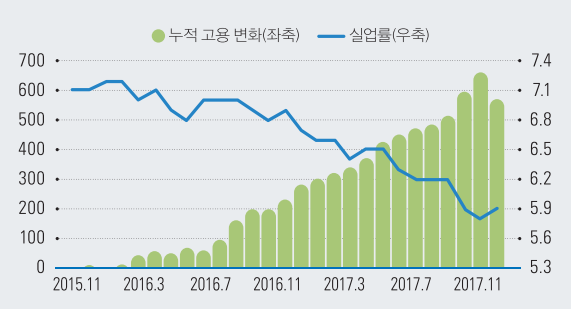
02 캐나다의 중기 경제·재정 전망

경제 전망

캐나다의 성장률,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최근 경제 상황은 긍정적이다. 〈그림 3〉에서 2016년 중반부터 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국가 중에서 캐나다가 3.2%로 가장 높다. 또한 〈그림 2〉에서 캐나다는 약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실업률은 7.1%에서 5.9%로 감소하였다. 이 실업률은 지난 4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와 같이 캐나다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이유는 소비지출이 증가하였고 지역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를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유럽, 개발도상국 등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캐나다의 투자와 수출도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다.

그림 2 누적 고용 변화와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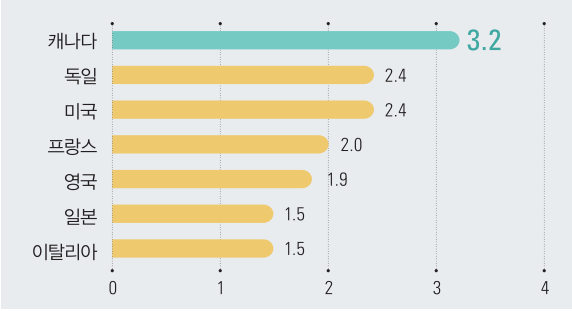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주: 마지막 수치는 2018년 1월 기록임
자료: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chart 1.1

그림 3 G7 국가의 평균 GDP 성장률 비교

(단위: %)



주: 분기별 평균 실질GDP 성장률을 의미, 캐나다는 2017년 3분기까지, 이외 국가들은 2017년 4분기까지 반영됨
자료: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chart 1.1

이와 같은 전망은 2017년 12월에 경제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기초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2018-2019년 예산안에서 예측한 2018년 실질GDP 성장률은 2.2%로 2017년 예산안과 2017년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이하 FES)의 예측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예산안에서 1.9%로 2017년 예산안보다 낮게 수정되었다. 2018년 실업률은 2017년 예산안과 2017년 FES 예측치보다 더 낮게 수정되었다.

표 1 캐나다의 경제 전망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2017-2022년)
실질GDP 성장률							
2017 예산안	2.1	2.0	1.7	1.7	1.8	-	-
2017 FES	3.0	2.1	1.6	1.7	1.7	1.8	2.0
2018 예산안	3.0	2.2	1.6	1.7	1.6	1.8	2.0
소비자물가지수							
2017 예산안	2.0	2.0	1.9	1.9	2.0	-	-
2017 FES	1.6	1.9	1.9	1.9	1.9	2.0	1.9
2018 예산안	1.6	1.9	2.0	1.9	1.9	2.0	1.9
실업률							
2017 예산안	6.9	6.7	6.7	6.6	6.4	-	-
2017 FES	6.5	6.3	6.3	6.4	6.3	6.1	6.3
2018 예산안	6.4	6.0	6.0	6.1	6.0	6.0	6.1

자료: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Table A2.1 일부 발췌

향후에도 가계소비지출 및 투자 증가는 캐나다의 경제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일 가격의 상승 또한 석유 매장량이 많은 캐나다의 소득과 투자에 긍정적일 수 있다. 반면 높은 가계부채[4]와 보호무역주의는 캐나다의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정 전망

2018-2019년 예산안에서는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채무 등에 대한 재정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018-2019년 총수입

4 캐나다의 가계부채는 2015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173%로,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은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도 명목GDP 증가율을 반영하여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19년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14.5%이며 그 이후로도 이 비율은 거의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캐나다의 재정 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 달러, %)

	2016-2017년	전망(projection)					
		2017-2018년	2018-2019년	2019-2020년	2020-2021년	2021-2022년	2022-2023년
총수입 (GDP 대비, %)	293.5 (14.4)	309.6 (14.5)	323.4 (14.5)	335.5 (14.5)	348.0 (14.5)	362.1 (14.6)	373.9 (14.5)
총지출 (GDP 대비, %)	311.3 (15.3)	329.0 (15.3)	338.5 (15.2)	350.0 (15.1)	361.9 (15.1)	372.9 (15.0)	383.2 (14.9)
재정수지 (GDP 대비, %)	-17.8 (-0.9)	-19.4 (-0.9)	-18.1 (-0.8)	-17.5 (-0.8)	-16.9 (-0.7)	-13.8 (-0.6)	-12.3 (-0.5)
연방채무 (GDP 대비, %)	631.9 (31.0)	651.5 (30.4)	669.6 (30.1)	687.1 (29.8)	704.0 (29.4)	717.8 (28.9)	730.1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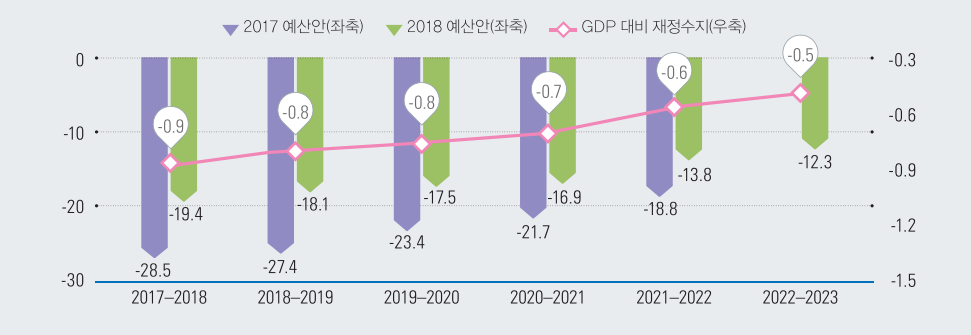
자료: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Table A2.6 일부 발췌

캐나다의 2017-2018년 총지출은 3,290억 달러로 2022-2023년 3,832억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18-2019년 15.2%에서 2022-2023년 14.9%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을 발생주의에 기반한 프로그램 총지출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 총지출은 개인 이전, 정부 간 이전, 직접 프로그램 지출로 구성된다.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은 고령자 지원(Elderly benefits), 고용보험 지원(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아동 지원(Children's benefits) 등이 있다.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금액은 2017-2018년 944억 달러에서 2022-2023년 1,161억 달러로 증가한다. 정부 간 주요 이전은 2017-2018년 705억 달러에서 2022-2023년 847억 달러로 증가하며, 직접 프로그램 지출도 2017-2018년 1,397억 달러에서 2022-2023년 1,49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비율은 GDP 대비 4.4%~4.5%, 정부 간 주요 지원 비율은 2022-2023년까지 3.3%~3.4%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프로그램 지출 비율은 2017-2018년 6.5%에서 2022-2023년 5.8%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8-2019년 예산안에서는 경제 성장을 이끌고 중산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정책을 반영하여 2017년 FES에서는 위험조정을 포함한 2017년 재정수지를 199억 달러 적자로 예측하였지만, 2018-2019년 예산안에서는 194억 달러 적자로 조정하였다. 〈그림 4〉를 보면, 2017-2018년 예산안보다 2018-2019년 예산안에서 연평균 약 70억 달러의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4 캐나다 재정수지 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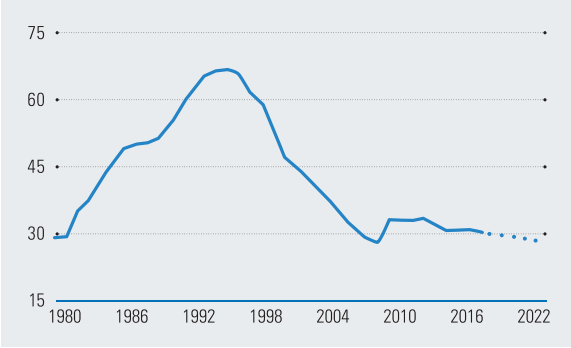


자료: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Chart A1.16

〈그림 5〉는 GDP 대비 연방채무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비율은 2022-2023년 28.4%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MF에 의하면, 캐나다의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를 포함하는 G7 국가 중에서 가장 낮으며, 이들 국가의 평균 순채무 비율의 절반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그림 6〉 참고). 이러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평등과 성장을 기조로 하는 중산층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5 연방채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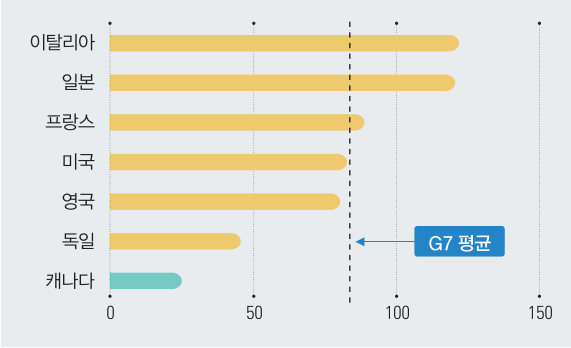
(단위: %)



주: GDP 대비 연방채무 비율
자료: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chart A1.15

그림 6 G7 국가의 일반정부 순채무 비율

(단위: %)



주: GDP 대비 일반정부 순채무 비율
자료: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chart A1.15

세계를 제패한 영국의 국가 프로젝트

하연수
hayonsu@naver.com

교황으로부터 독립한 헨리 8세,
해적 활용한 엘리자베스 여왕

England

영국은 한때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보유하고 최초의 산업혁명을 이루며 근대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국가였습니다. 영어가 사실상 세계 공용어가 되었다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영국은 어떻게 해서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 '마그나카르타'일 것입니다.

마그나카르타란 1215년 당시 거듭된 전쟁비용의 징수에 질리던 영국의 시민과 귀족들에게 '두 번 다시 멋대로 세금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과 한 것입니다. 마그나카르타 이후 전쟁비용을 세수로 충당하기가 무척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정비해야 했고, 국왕들이 짜낸 다양한 방책들은 결과적으로 대영제국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로마교회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영국내의 모든 교회재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역사시간에 우리는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파문을 당했다고 배웠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 영국의 재정 문제가 얽혀 있지요. 헨리 8세가 캐서린과의 이혼을 인정하도록 로마교황에 요구했을 때, 헨리 8세는 로마교회에 헌금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황과의 관계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혼은 인정되지 못했고 결국 파문당하고 맙니다. 헨리 8세는 내심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를 계기로 그는 영국교회를 로마교회로부터 이탈시켰습니다. 그리고 1534년에 '국왕지상법'에 의해 자신이 영국교회의 최고위자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헨리 8세는 영국의 모든 기독교 교회의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헌금도 자신의 금고로 보내도록 한 것이지요.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가 차원에서 해적을 활용해 많은 부를 창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의 영국은 모직물을 독일 등으로 수출하는 무역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항로를 개척하고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포토시 은산을 발견하면서 유럽 경제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은 수출이 주력 사업이었던 독일이 쇠퇴한 것입니다. 관세나 무역의 독점권은 국가세수의 중심축이었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나빠지면 국가(왕가)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고육책으로 해적 행위에 손을 뻗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해적단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있던 해적들을 회유하여 이용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발탁한 해적은 프랜시스 드레이크였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마젤란에 이어 세계일주를 하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른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해군 제독입니다. 원래는 평범한 해적이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아 국가 프로젝트 차원의 해적 행위를 하며 훗날 해군 제독의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드레이크는 이러한 해적 행위로 영국에 약 60만 파운드를 가져다주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절반인 30만 파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국가예산이 20만 파운드 정도였으니, 엘리자베스 여왕은 1년 반치의 예산을 드레이크의 해적 행위로부터 얻은 셈입니다. 해적 행위는 영국만 하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국제해운은 공공연히 해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어느 국가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는 해적이라 부르지 않고 '사략선(私掠船)'이라 불렀습니다. 사략선이란 국가에 의해 '적대국의 배를 나포하는 행위를 인정받은 해적선'을 의미합니다. 영국에서는 해적선에 대해 사략선 취급을 해주는 대신에, 약탈한 물품의 5분의 1을 국고로 헌납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야말로 해적은 당시 영국의 국가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PFIS NEWS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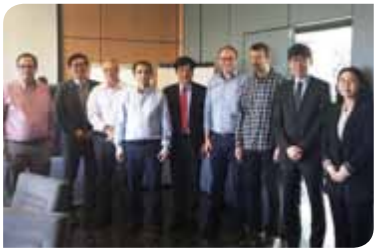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3월 15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로, 6개 참여예산 과제에 총 422억 원을 반영하여 본격 시행 중이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국민들은 손쉽게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국가예산 전반에 관한 정보와 제안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사업의 검색이 가능하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향후 네티즌 의견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활동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나라도움 포털사이트 전면 개편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해 1월 개통된 e나라도움 포털사이트의 사용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서비스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3월 30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모바일 기기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사용자의 접속 편의를 제고했으며, 유사·중복 메뉴 통폐합 및 모호한 화면 콘텐츠의 수정으로 사용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스 재무부 대상 재정정보시스템 관련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3월 19일 그리스 재무부를 방문하여 재정정보시스템 및 운영조직 등을 소개하는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제협력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스 재무부는 본 세미나를 통하여 dBrain의 전자고지수납(EBPP), 타기관 연계(조달청 등)방식 등을 그리스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시 지향해야 할 시스템으로 인식하였으며, 한국재정정보원과 같은 정부 내 재정전문기관 설립·운영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앞으로도 양국 간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교환하고 필요 시 해당 분야 지식 및 경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월간

나라 재정

APRIL
2018 Vol. 16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현수(한국재정정보원장 직무대행)
편집위원장	박용주(재정정보연구본부장)
편집위원	장정진(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성진(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사무관) 연훈수(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심혜인(재정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오병욱(경영지원본부 차장) 이현석(dBrain운영본부 차장) 박종필(사이버안전센터 차장) 김칠수(e나라도움운영단 차장)
편집간사	김도일(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원)
디자인 · 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549-5298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APRIL
2018 Vol. 16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ISSN 2508-8971